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7월 총파업은 실질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사진 이미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 (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6~7면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10면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8~9면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12면

우체국
노동자 투쟁

4, 5면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3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하면 환경 파괴가 심각해질까?

문재인 정부는 6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누진제 완화로 최대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 142원 줄어든다.

그런데 6월 21일에 열린 한국전력(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이 조치를 시행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2900억 원 댈 건힐 텐데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분명치 않다는 게 이유다.

사실상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인데, 그동안 정부가 한전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며 수익 압박을 가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특히 수익성을 이유로 자회사를 만들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는데, 이제 적자 수천억 원을 감수하라고 하니 일관성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회사와 발전사, 발전자회사들을 완전히 국유화하고 필요한 재정을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전기요금 때문에 애민 사람들이 폭염과 혹한에 숨지는 야만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한 세기 전에나 봤을 법한 작업 현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값싼 전기 덕을 보며 어머어마한 부를 쌓아온 기업주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

한편, 정부가 누진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일각에서도 이를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 중 일부는 완전히 합당

하다. 예컨대 정부안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없고, 심지어 전기요금 원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재난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대책도 없다.

전기 사용량 증가가 기후변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해할 만하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 때문인데 발전 부문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전기 생산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의 전환이 없다면 20년쯤 뒤에는 기후변화에 백악이 무효할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다.

기업주 부담 떠넘기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필요 없다거나 누진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아마도 누진제 완화가 전기 사용량을 늘려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할 뿐이라고 여긴 듯하다. 혹은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줄여야 한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 비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히려 줄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었기 때문이지만 주택용 전기 사용량의 절대치도 크게 늘지는 않았다. 여름철 사후 요금 감면으로 누진제가 완화된 2016년 이후에도 그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오른쪽 상단 그림)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 필요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오히려 비싼 전기요금 탓에 필요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후변화 탓에 폭염이 더 흔한 일이 되고 에어컨이 필수재가 된 지 오래지만,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겨울에도 전기 난방기를 쓰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늘고 소규모 난방을 하기에는 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영향이 크다. 정부가 에너지 공급을 시장화하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게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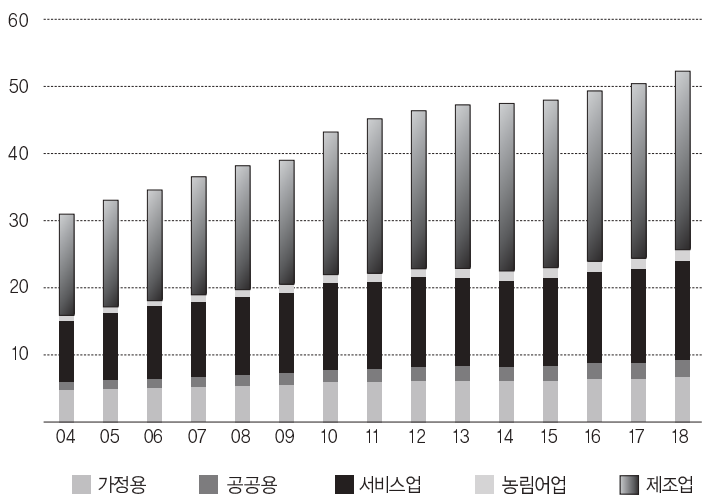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끼리 전기요금 인상 경쟁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필수재인 전기는 병원비, 교육비처럼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 나라들에서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지배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해 왔다.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줄지는 않았다.(오른쪽 하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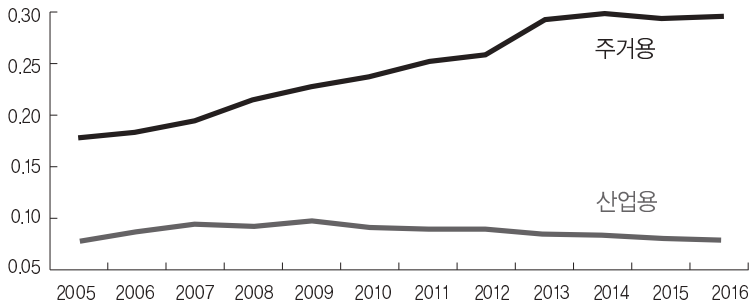
게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55.8퍼센트)과 상업(24.6퍼센트)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분야 전기 사용료에는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할인액만 해도 주택용 전기요금 전체와 맞먹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처럼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실을 해 왔을 뿐이다. 산업과 상업에 전기요금 할인제를 얹어고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게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다.

용도별 전력판매량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별로 늘지 않았다 (출처: 한국전력)



독일의 전기요금 추이 (유로/kwh)
한국이 따라야 할 모범? (출처: EUROSTAT)



재생가능 에너지

기후변화를 멈추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 잠재량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전기의 총량을 훨씬 웃돈다. 그런데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노동자들이 전기를 ‘물 쓰듯’ 사용해서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 이사회의 힘겨루기에서 보듯 진정한 결정권은 이들에게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윤과 경쟁 때문에 전

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윤 축적이라는 체제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집단은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이 이끄는 근본적 사회 변혁만이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이룰 기초를 놓을 수 있다.

또한 노동계급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할 민주적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잠재력은 자신들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그 실형 여부가 달려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조건을 하락시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 변화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정호중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5월 하순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래 다섯 차례 연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100~250여 명이 참가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이 참가하는 세종호텔공투본이 연대의 중심축이다.

규모 있는 연대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20일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1박 2일 호텔 로비 농성에 들어 갔다. 2012년 1월 파업 때 로비 점거를 한 이래 7년 만이다. 로비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당시를 떠올렸다. 위원장으로 당시 파업을 이끌었고 지금은 해고자 신분이 된 김상진 동지의 감회가 특히 새로웠다.

노동자들의 행동에 허를 찔린 사측 관리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들의 기세에 눌려 감히 농성자들을 끌어내지 못했다.

연대 단체들은 호텔 밖에서 로비 농성을 응원하는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비스연맹은 7월 4일 3차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파업 한복판에서 세종호텔노조 투쟁이 주목받는 것은 연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희망 텐트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29일에는 세종호텔 앞에서 1박 2일 희망 텐트가

진행된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연대를 모으기 위한 계획이다. 이 일정을 신문 지면에 광고하려고 조직한 세종호텔 투쟁 지지 선언에 190곳 단체, 1200명가량 참가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특히 노동조합 소속들이 많았다.

연대 확대와 조합원들의 단단한 투쟁 의지가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의 세 가지 요구 중 두 가지에 양보 의사를 밝혔다. 1) 마지막 남은 강제 전보 조합원은 희망하는 부서를 존중해 발령할 수 있다. 2) 성과연봉은 세종노조와 연합노조간 평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의 복직만큼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해고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치점이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방패막이로 버티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종호텔 사측이 차마 할 소리는 아니다.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의 사돈은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현재 구속 중이다.

대양학원 이사장 유명환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으로 있으면서, 양승태의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는 로비를 벌였다.(대양학원은 세종대학교 재단으로, 세종호텔은 재단의 수익사업체다.) 이 건으로 유명환은 검찰 소환을 당했고, 관련 재판에서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다.

사측의 대법원 판결 운운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사측은 군말 말고 김상진을 복직시켜라!

지난 5월 문재인은 전임 정부 시절 생긴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전부 해결했다고 말했다. 해결 내용은 둘째치고, 이 말은 거짓말이다. 세종호텔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라!

김인식

함께 참가합시다!

세종호텔 희망 텐트 집회

일시: 2019년 6월 29일(토) 오후 7~9시
장소: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주최: 세종호텔공투본
※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희망 텐트 난장이 이어집니다.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 글은 좌파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규탄하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 파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두는 속도가 박근혜 정부보다 빨랐다. ‘노동 존중’에서 ‘구속 수감’까지 2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 공약을 핑계치고 빠르게 후퇴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정책 후퇴의 정점”이라고 규탄했다.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후퇴와 노동개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민주노총의 저항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전투성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이 추진될 국회 개원에 즈음해(또한 3~4월에 있었던 지난번 국회 항의 투쟁을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6월 25일 국회 정상화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이 통과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7월 투쟁도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노동 존중’에서 ‘구속 수감’까지 2년 남짓 지금의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해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조선업 구조조정, 공공부문과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노동법 개악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은 “일자리 늘리고 소득 올리겠다”던 문재인인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와 파업권을 정조준하는 것들이다.

문재인-자한당은 노동개악 “원 팀”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을 “한국경제 리스크”(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원 팀”이 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한당은 4월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며 정부·여당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노동개악 문제에서 정부·여당의 인식이 자한당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바로 “리스크” 제거 정책이고,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에 임금 억제와 파업권 제약 등 양보를 종용해 왔다. 최근에는 여당 지도부 내에서 최저임금 동결 주장마저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정부가 민주노총 배제와 탄압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사회적 대화” 제의 뒤에 감췄던 채찍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여당과 자한당은 다른 문제로는 서로 싸울지라도 노동 문제에서는 “원 팀” 즉 한 패이다. 정부·여당이 적폐 세력과 진지하게 싸운다고 착각해, 그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일시적 분노 넘어 효과적 투쟁 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직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제 노정관계가 파탄났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가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일시적인 분노와 볼멘소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정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화와 참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상당 수위의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지금 투쟁 동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노동자 투쟁은 여러 전선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그러나 서로 흩어져 전개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그리고 과로사,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등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켜 전면화하고,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으로 상승시켜 가야 한다. 특히, 현장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를 꺼리며 흩어져 싸우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이 점을 활동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지금은 분노를 쏟아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2019년 6월 25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사람들(교차사), 평등노동자회

국회 통과 기다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들

박근혜가 하려던 의료 민영화 계속하는 문재인

김재현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판 의료 민영화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를 실행할 여러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자한당 이명수)은 병원이 만든 ‘의료기술 협력단’이 외부투자를 받아 의료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가 산하에 자회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영리기업들만 들어 병원에서 만든 기술, 기기, 약 등에 특허를 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영리기업이 만든 것이니 환자들에게 매우 비싸게 팔리게 될 것이다.

삼성병원,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도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꾸고, 인증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민주당 이재근)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이명박근혜의 민영화 정책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

로 만들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거래하고 다른 정보들과 결합(이렇게 하면 누군지 식별해 낼 가능성이 커진다)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기업과 민간 병원들도 개인질병정보를 맘대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도 민간에 공개해 정보 결합이 가능하게 만들려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제약회사들

은 광고와 판매 대상을 특정할 수 있으니 이익을 볼 것이다. 반면 그렇게 식별된 환자들은 치료비, 보험료 등에서 차별을 당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업에 유전자 검사 규제도 풀 작정인데, 아예 정부가 100만 명의 ‘국가 바이오빅데이터’(유전체 포함)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다. 벌써 ‘8대 암과 12개 주요 질환을 집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그러나 유전체 정보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과 유전자 간 관계가 밝혀진 게 10퍼센트도 되지 않고, 유전체 검사 결과가 기업마다 다른 경우도 많다. 유전체 정보를 포함한 개인질병정보는 유출되면 다른 정보들과 결합돼 식별이 가능해지고, 이 정보들은 개인들의 취업, 승진, 결혼에 불이익을 미치고 기업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셋째,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 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법령해석위원회’(위원, 회의록 비공개)를 하나 만들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한

다고 한다.

의료행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할 수 있게 한다. 원래는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예방, 상담, 교육, 재활 등을 민간 기업들이 제공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강·생명도 돈벌이로

스마트 시계, 스마트 벨트 등 각종 스마트 기기와 혈압계 등 체외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과 건강관리업체들은 기기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보험상품 개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근거는 없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가 갈 같이 구분되지 않는 부분들을 파고들어 민간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다.

이 법안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바이오업계가 요구해 만들어졌는

데, 인보사 사태 발생 후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이 법안은 재생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과 판매를 위한 것으로,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제 불명의 시술이 환자들에게 행해질 수 있다.

삼성이 제시하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진행해 왔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빛을 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부담을 낮춰 주겠다고더니,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무력화하는 민영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는 한 톨도 쓰지 않으면서, 바이오산업 혁신전략에서 밝힌 의료 민영화에는 연 4조 원 넘는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정부와 주류 정당들이 이윤을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건강과 생명, 안전마저 돈벌이 기회로 만들어 주려는 지금, 노동운동은 문재인인의 의료 민영화 저지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정환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일 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달에도 여러 명 죽어 나가는 살인적 노동 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은 “내일 아침에 못 일 어날까 봐 밤에 잠드는 게 무섭다”며 불안에 떨어 왔다.

우정본부는 “국민경제 영향” 운운하며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철회하라고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도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을 직제와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또 시간만 끌려 한다. 대통령 당선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집배원을 증원해 과로사를 근절하겠다고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지난해 정부와 우정본부는 (불충분 하나마) 정규 집배원을 증원하고, 토요일 근무를 폐지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우정본부가 이를 즉각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2019년 예산 범위 안에서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어기고 있

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정부 재정 역시 2년 연속 흑자다. 집배원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와 실천 부재가 진짜 문제다!

따라서 6월 18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핑계로 또다시 시간을 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턱없이 부족한 양보안

파업을 예고한 날씨가 다가오자 최근 교섭에서 사측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6월 25일 찬반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동호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올해 정규 집배원 증원은 어렵다며] 위탁택배원 증원을 제시했는데, 수용할 수 없는 규모였다”라고 얘기했다. 일각에서는 위탁택배원 500명 증원 얘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증원으로는 살인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힘들다. 전국 250여 곳 우체국 당 위탁택배원 2명을 배정할 수 있는데, 매년 20퍼센트가량 늘어나는 택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지난해에도 위탁택배원 약 1000명을 늘렸지만, 올해 집배원 9명이 사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택배 물량뿐 아니라 등기도 늘고 있어요. 현재 집배원 1명이 담당하는 구



연이은 집배원 죽음에도 인력 증원 약속 시간 끄는 냉혈한 문재인 정부

역이 넓습니다. 정규 집배원을 늘려 배달 구역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조경훈 집배노조 인천계양우체국지부장)

“대도시와 지방 중 일부 도심 외 구역들은 수지가 안 맞아 위탁택배원들

이 안 가려 합니다. 최근 사망한 집배원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지방인데, 그만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오현암 집배노조 고양일산우체국지부 조합원)

더구나 위탁택배원 증원은 장차 구

조조정지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3월 말에 우정본부는 재정 적자 해결책으로 퇴직자 충원을 억제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정규 집배원 감축을 추진하고, 집배원의 소포 업무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금번 추경예산에 정규 집배원 증원 예산을 반영해서 약속대로 올해 1000명을 증원하라고 요구한다. 차선택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무기계약직 집배원 1000명을 즉각 증원하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우정노조는 중노위 권고를 수용해 6월 25일로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를 7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우정노조 집행부가 7월 6일 파업 출정식 전에 합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 투표에서 노동자들이 보여 준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이제는 노동조합이 제대로 투쟁해야 한다는 촉구이기도 하다. “더는 양보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보여 줘야 한다는 마음들이 큼니다.”(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기층의 투쟁 의지가 상당한 만큼, 실제로 파업에 돌입해 단호하게 싸운다면 정부로부터 더 나은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사업본부에는 더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 퇴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이행했더라도, 죽음의 현장은 바뀌었을 거예요.

[지난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공무원 증원에 발목을 잡으면서, 당 대표들이 만나서 [집배원 증원 예산을] 배제했어요. 민주당도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얼마 전 국회 과기



정통위원장(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들을 만났고 당정협의를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연이은 집배원 과로사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반면 많은 국민은] 집배원 과로사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영등포

역과 부평역에서 집배원 증원 서명을 받았는데 장사진을 이뤘어요.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에 1100명이 증원됐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기사를 늘렸어요. 그런데 최근 3~4년 동안 택배 물량이 매년 20퍼센트가량 증가해서, 지난해 증원한 위탁택배원 규모로는 많이 부족해요.

위탁택배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느다면, [정규직]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특위 설치를 제기했는데, 뭘 또 조사할 게 있을까요? 약속만 이행하면 됩니다. 지금 경사노위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파업을 준비하는 마당에 사회적 타협을 이뤄낸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배노조는 7월 9일 파업 돌입에 앞서 7월 6일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1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분들을 기리며, 조합원 101명이 삭

발하고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집배노조는 이날부터 토요일 근무를 거부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동 문제에서 자본의 편을 들면서 노동자의 권리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한다면, 여느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이기도 합니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다.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라고 합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기존 인력 재배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보편성을 위해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운영 구조입니다. 10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의 수익 중 2조 8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가져 갔습니다. 이제 [본부 사업 중] 우편사업이 적자가 나는데, 정부에서 보전에 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입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발족과 결과를 보며 뭔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

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약속들이 파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그때만 면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들]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과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줬다면, 목숨을 잃은 동료들은 더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의 행태에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근무 폐지도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약 1년 정도 토요일 근무를

중단했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 모든 통계를 보면 집배원 사고율, 사망률이 확 낮아졌어요.

‘주 52시간법’이 통과된 후 우체국에서는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노동을 강제하고, 유연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배원만이 아니라 계리원, 우편원 등 다른 직종들에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문제 해결을 다시 경사노위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우리 동료들이 죽어갈 텐데..., 이제는 정부가 무조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올해 1000명, 내년에 추가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2000명도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 500명으로 패우겠다? 그 정도로 해서는 절대 죽음의 현장은 바뀌지 않아요.

조합원들은 ‘과거처럼 보여 주기 식으로 끝나는’ 안 되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투쟁이 멈춰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참을 뜯들이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개편 연구 용역’을 시작했지만, 이조차 중단해 버렸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연구 용역 재개 요구에 묵묵부답이고, ‘수서고속철도와 KTX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도 논란이 많다며 수서고속철도와 KTX 통합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수익성

수서고속철도 분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노선을 쪼개 철도공사의 수익이 줄면, 적자를 내는 노선의 열차 운영을 줄이거나 폐지해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서고속철도 분리 유지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수서고속철도 분리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살아날 위험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수서고속철도와 KTX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대응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쏟아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대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의료 영리화 조처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민간 투자 공공 사업 조기 착수도 추진되고 있다.

철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인사들은 철도공사에서 철도 관제권을 분리(경쟁체제 고착)하거나 시설유지보수 부분을 분리하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철도 관제권을 갖고 있으면 철도 분할 민영화에 방해가 된다면서 이전 보수 정부들은 관제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쉽사리 수서고속철도와 KTX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성취하려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맞서 싸워야 한다.

임금 억제, 인력 부족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크다.

문재인 정부 2년 내내 임금 억제 압박이 상당했다. 철도공사 사측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연가 미사용 수당 반납, 초과근로 억제 등을 강요했다. 인력 부족으로 연가 사용이 제약되고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 적잖게 있는데도 말이다.

올해도 철도공사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기관사들의 수당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총액인건비

는 정해져 있는데 기관사들이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기 어렵다고 이간질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거듭 양보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레퍼토리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사측의 이런 말을 끝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또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4조2교대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엔 4조2교대가 전면 시행되려면, 반드시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는 철도 전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4000여 명이상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임금도 보전되길 바란다.

이런 요구들을 성취하려면, 수서고속철도와 KTX 통합, 그리고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를 결합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서고속철도 분리는 철도의 적자를 늘려 인건비 등 비용 절감 압박을 더 키울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조건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방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투쟁은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이정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6월 20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인천 부평우체국 앞에서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적폐 청산 시리즈’의 첫 행사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다. 우체국 청사의 시설 관리, 미화, 경비 등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원래 이 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2000년에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외주화해 간접고용으로 대체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 대비 42퍼센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노동자들은 2015년 노조 설립 후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노조 설립 때부터 부당 해고, 원거리 강제 전보, 인사 불이익 등을 자행하며 탄압했다. 올해에도 임금 협상 기간에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에게 자택 대기에 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근에는 1인당 청소구역 외 업무를 거부한 인천 부평우체국 미화 노동자

9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미화 노동자들의 1인당 청소 면적은 민간 기준(최대 400평) 대비 최대 189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다.

“전국에 미화원 8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이 432명입니다. 3명이 해야 할 업무를 2명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평우체국은 18명이 해야 할 일을 2012년부터 11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며 1인당 청소구역인 400평만 청소하겠다고 사측에 얘기했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없을 때부터 모든 구역을 미화원들이 다 청소했다’, ‘옛날에는 다 했는데 지금은 왜 못 하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미화원들에게 경고장과 징계, 자택 대기를 남발했습니다. 미화원 11명 중 9명이 징계를 당했습니다.”(박정석 지부장)

부평우체국 미화원 노동자들은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부평우체국 앞에서 120일째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본사 사람들”이라며 사측을 규탄했다. 이런 과중한 업무 강요는 부평우체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처우 개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만이 상당하다. 노동자들은 시설관리단이 아니라 해당 우체국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시설관리단은 공공기관 자회사란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로 분류됐다.

노동자들은 이런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피해를 받아 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우정사업본부한테서 예산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2500명에게 최저임금에 불과한 월급을 주고 남은 예산을 ‘수익금’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반납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우정사업본부로 반납해 온 것이다. 이 돈은 지난 19년간 333억 원이 나 된다.

올해 임금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는 전 직종 월 20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그런데 사측은 최저시급에서 미화원은 20원, 경비원은 70원 인상하는 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다른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받는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한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수당으로 최대 15만 원(매년 1만 원씩 인상) 지급받는다. 그러나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의 장기근속수당은 최대 5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측은 이를 고작 7만 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사측은 성과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일삼아 왔다. 지난해까지 본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영평가 성과금을 110퍼센트 받는 동안,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과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 했다. 사측은 올해 성과금으로 48퍼센트 지급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6월 25일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투쟁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나 7월 9일 우정노조·집배노조의 공동 파업 때 자신들도 투쟁에 합류할지 논의 중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유병규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 ★ **21세기 레닌주의⑥: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의 의의
- ★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 ★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어디 가고 동결 요구
- ★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한다
- ★ **법 공백 악용한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 **인터뷰 7월 파업 앞둔**
안원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율 고착 10퍼센트대
- ★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소식**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공공부문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이정원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 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38곳에서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은 ‘직무 중심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직무급 중심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임금공시제도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 연구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직무를 분석해 표준 직무 분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직무급제 개편이 노리는 것

문재인 정부는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해서, 현재 한국의 주된 임금체계인 연공급제(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 연구자들은 파이의 크기가 늘지 않는 저성장 시대에는 일부 노동자들이 계속 연공급 혜택을 고집하면 나머지가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답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서 직무급제 도입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노동자 간의 분배 방식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지적해야 할 것은 한국 경제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상대적 몫은 줄어 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공정’한 분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2016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과 비교해 무려 10퍼센트포인트가 줄었다. 최근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노동생산성 증가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OECD 주요 20개 국에서는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2.07퍼센트포인트 줄었다. 한국의 감소폭이 무려 다섯 곱절이다. 이를 계산한 건국대 주상영 교수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 평균에 부합하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 원 많고 자본소득은 그만큼 적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진정한 ‘불공정’ 문제는 노동자들 간의 분배 기준이 아니라 기업과 대비해 노동자 몫이 줄어 온 것에 있다. 결국 정부는 그 원인을 노동자 간의 분배 문제로 돌리는 책임 전가를 하는 셈이다.

이는 직무급제 개편을 위한 첫 단계다. 표준 직무 분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기관들의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 사측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도 직무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인사혁신처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해 그에 맞는 임금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들이 추진하다 만 직무급제를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일방 강행처럼 안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말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아전 인수격 해석

정부가 직무급제를 통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실현한다는 것도 노동자들이 바라는 임금 차별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100여 년간 노동운동은 성별이나 고용형태, 인종 등에 따른 차별에 항의하고 낮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투쟁의 구호로서 동일임금은 차별 받는 저임금 부문의 임금을 올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은 이와 다르다. 직무가치가 낮으면 임금이 낮은 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도입한 ‘공공부문 표준 임금체계 모델’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전환된 노동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가장 낮은 직무(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로 분류됐다. 그리고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을 제약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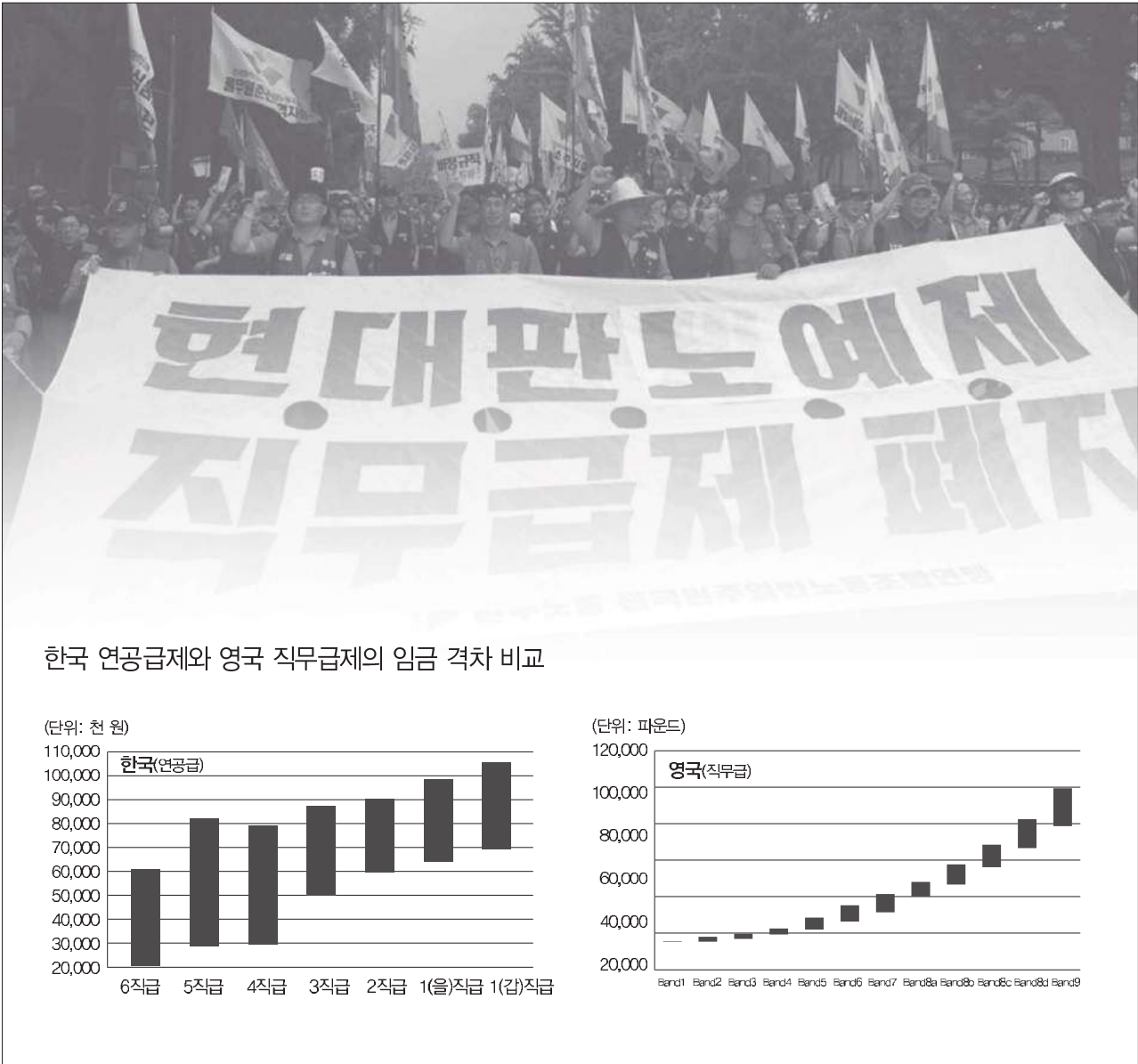
정부는 이래 놓고는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한 직무에 따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니 공정하다고 한다. 임금이 낮은 것은 직무의 가치가 낮은 데 따른 것이니 차별은 아니라고 한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착화에 크게 반발하며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직무급제가 임금 차별 감소는커녕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직무 평가는 환상

직무의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은 핵심적인 논란거리다. 직무급제 지지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직무 평가 방법들이 개발돼 ‘과학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측정하는 게 아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데서 성과주의 강화라는 전임 정부들의 정책을 이어



연공급제(한국)와 직무급제(영국)를 비교하면,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 간 임금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어 임금 격차를 늘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도 직무급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이 직무성과급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직무의 분류와 평가는 사용자들의 이익(수익성)을 중심으로 짜여지기 마련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영진과 관리자의 업무가 ‘기술, 노력, 책임’ 요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높은 직무가치를 인정받는다. 직접적인 수익 성과가 직무가치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당장 돈 되는 업무와 아닌 업무)

작업 환경과 노동시간 같은 노동조건, 측정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숙련도는 직무 평가 요소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해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는 낮은 직무로 평가받기 일쑤다.

그래서 기업 CEO의 직무는 생산직 노동자의 직무보다 몇십 곱절 높게 평가되는 게 정당하게 취급된다. 또 직무가치 평가 과정에서 나이, 성별, 인종, 학벌 등 온갖 편견도 크게 작용한다. 직무 분석 평가는 ‘공정’하기는커녕 자본주의의 차별 논리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공공부문에서 직무 등급이라는 사실상의 서열을 도입하는 것(차등 정당화)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협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억제가 진정한 목적

게다가 직무급제 도입 맥락을 봐야 한다.

이미 직무에 따른 직군제 분리가 직군제 ‘정규직화’, 자회사 ‘정규직화’ 방안 등에 이용돼 왔다. 심지어 외주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직무급제로의 전면 개편은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직무급 자체가 산별 교섭 체계에서 임금 협상 대상이 되므로 임금 억제 압력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이다.

자본주의에서 사용자들은 ‘공정 계약’이라는 외관을 전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임금 지불 방식을 바꿔 착취의 증대를 꾀하곤 한다. 사용자들이 지금은 연공급제를 없애는데 안달이지만, 이 제도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초기에 노동력을 끌어모을 때에는 이윤 증대에 유리한 제도였다.

낮은 숙련을 핑계로 낮은 초임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싼값에 불러 먹으면서도 미래의 (평생 고용과 연공급제에 따른) 임금 보장을 미끼로 노동자들의 충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직장 이동을 줄이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자 인건비 부담을 느끼면서 이를 줄이려고 한다. 연공급제를 핑계 대며 가파른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불평은 20여 년 동안 계속돼 왔다. 1987년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초임이 대폭 오르고 근속에 따른 승진과 임금 상승이 제조업으로까지 확대돼 애초에 연공급제를 도입할 때의 이점(청년 노동자의 저임금 부려먹기)이 많이 사라진 것도 큰 불만 사항이었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정규직 대신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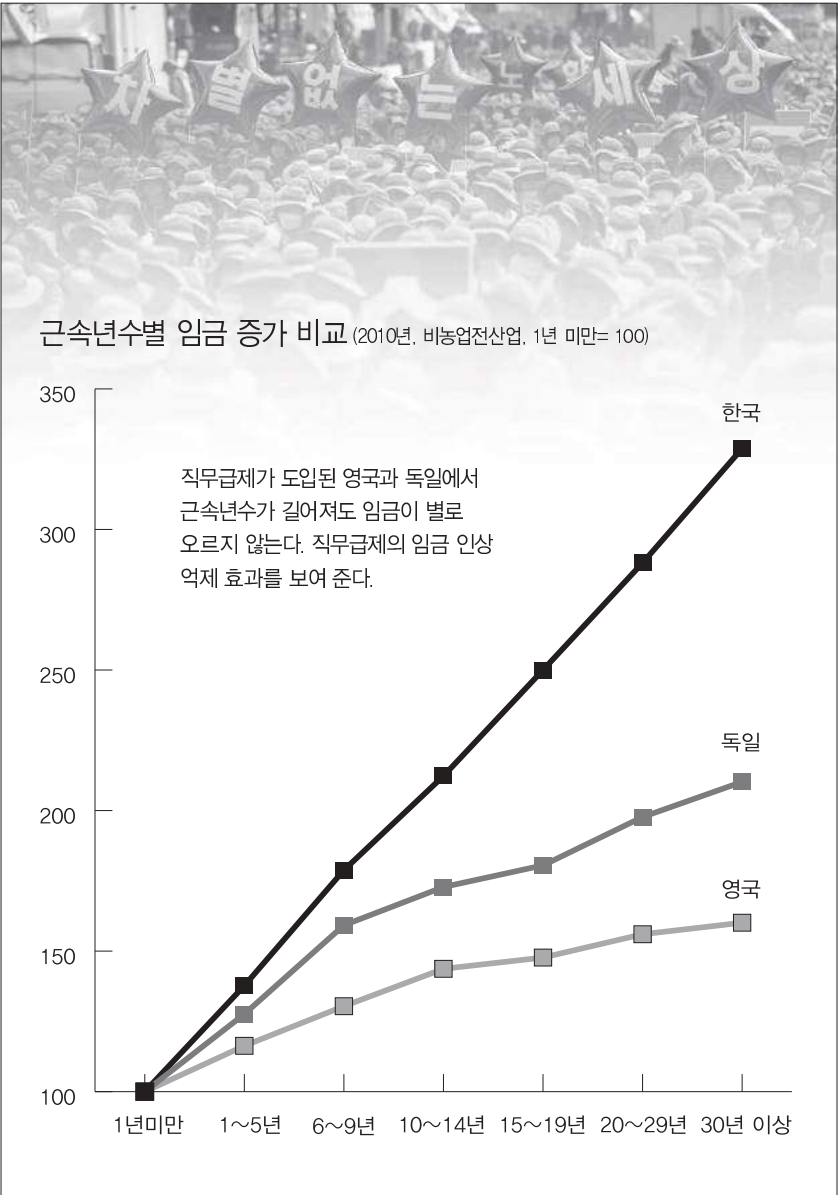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근속에 따른 인상을 억제하며, 임금 결정에 성과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 애써 왔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등 다양한 임금 억제 방안들이 제기됐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직무급제는 직무 등급 간 임금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어 임금 격차를 늘리게 돼 있다. 직무등급 내에 임금 상한선을 정해 뒤 상위 직무 등급으로 승급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서 임금 인상이 중단된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왜 연공급제를 문제삼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런 설계는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가령 새만금개발공사에 도입된 직무급제가 이렇게 설계됐다. 직무 등급 내 임금 상한선이 있고, 같은 직무 등급 내의 임금 인상은 성과 평가 비중을 가장 크게 반영해 개인별로 정하도록 돼 있다.

물론 직무급제 지지자들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은 삭감되지 않는다 해도 제도 개편의 맥락상 임금 억제 압박은 훨씬 커질 것이다.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그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장기화되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억제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체계 개편은 명백한 개악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독에 구멍을 내 무너뜨리려는 정부

정부가 공공부문에 직무급제 추진을 본격화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일방적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9월 하순~10월 초에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를 제일 먼저 도입했고 이후 일부 지자체들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추진한 것이 라지만, 정규직 전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직무급제를 강요했다.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자들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해 정규직까지 넓혀 가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저항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를 일단 청소·시설·관리 등 5개 직종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만 해당하도록 제시해, 나머지 노동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게 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도 가급적 손쉬운 대상을 골라 물꼬를 터 확대해 가려 한다. 이미 정부는 2018년에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에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최근 공공기관 산하 연구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규모가 작고 노조가 비교적 취약한 조건을 노린 듯하다. 또 성과연봉제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노조를 임금체계 개편 논의 테이블에 끌어들이려 할 듯하다.

따라서 직무급제 도입이 당연한 문제는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직무급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직무급제 반대를 분명히 해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의 직무급제 일방적 추진에 반대해 ‘선 노정교섭, 후 기관별 교섭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관별로 각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정작 직무급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일각에서는 직무급제를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노정교섭에서 “임금체계에 직무요소 도입 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급제가 개별 기업별로 성과와 연동돼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산업이나 사회적 차원으로 도입되면 연공급제보다 공정한 임금체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직무 분석 평가와 임금 수준 등을 노조와 함께 결정하면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제도 개편의 맥락을 봐

야 한다. 또, 임금 억제를 위한 제도 개편에 노조가 동의할 해 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단결이나 의식 고취에 해롭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직무급이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다. 산업적 차원의 직무급제가 저임금과 격차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직무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른 임금 차등을 ‘합리적(정당한) 차별’이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계급적 단결에 도움이 안 된다.

표준임금체계 도입이 개악이더라도 일단 업종별 임금 평준화를 이루면 단결이 쉬워지고 그 단결에 기초해 임금 수준은 나중에 싸워서 올리면 된다고 보는 주장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단견인 이유다. 정부와 사측이 도입한 제도에 의해서 누구는 깎고 누구는 올리는 과정 자체가 계급적 단결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체계 개악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폐지, 기존 노동자의 임금 저하 방지, 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 같은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임금 하락을 막는 안전 장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보완 조건을 쉽게 받아들여 하지 않을 텐데, 왜냐면 애초 직무급제 도입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개악 수용 여지를 열어두는 접근이 더 한층의 후퇴를 강요당하는 효과를 낼 위험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할 때, 임금피크제 수용을 전제로 노정교섭을 열어 폐해를 줄이겠다는 접근은 중앙 교섭도 안 되고 개별 투쟁들만 악화돼 결국 무기력하게 임금피크제가 단사별로 하나씩 도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건부 경사노위 참가론은 정부에게 전제조건(최저임금 개악 철회 등등)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는커녕 민주노총 내 논란만 키웠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직무급제 수용을 열어 두고 그 보완 조건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자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요구해 올 수 있다. 일부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보다는 직무급제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는 성과연봉제와 유사성이 크다. 특히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들에서 직무급제 도입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것에 부문주의적 관점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에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여전히 성과연봉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폭로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 지지와 관심을 모아낼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에서 직무급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정부 개악에 반대하는 단일한 저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정규직 양보론이 격차 해소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직무급제를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주목하기도 한다. 그 중에는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억제 주장도 있다. 그동안 여러 노

동조합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액임금 인상(액수가 중요할 것이다) 또는 비정규직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격차 축소를 요구했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려 하기보다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해 그 절감분을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소가 내놓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운동의 임금정책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전략 방향’은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고임금 부문의 인상 억제 총액은 저임금 부문의 추가 인상 재원으로 온전히 환류돼야 한다. 정부 역시 그에 비례해 자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연대임금 정책의 추진 유인과 불평등 축소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양보해야 정부와 기업들에게 양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실질적인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사용자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반론이 즉각 제기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 임금 인상 절감분을 비정규직 임금 인상분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는 문제인 정부를 통해 일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위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노조의 지향점 사이에 ‘저임금 불평등 문제의 적극적 해결이라는 교집합’이 있고, “그러한 교집합 위에서 상생의 구조개혁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는 저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에 진지한 관심이 없다.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마자 효과를 대폭 반감시키고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확산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여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론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의도는 전반적인 임금 억제인데다 민간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려는 의미도 크다. 즉, 한국 경제 전체를 보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선제적 양보는 정부를 설득하기는커녕 정부 논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 받는 위험한 효과를 낼 것이다. 이 추가 양보 압력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파급된다. 양보의 효과는 노동운동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일각에서는 정규직 임금 억제를 통해 노조 고위층 간 부들이 장차 공공부문 임금 결정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공공기관 운영 참여(노동이사제)가 가능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현장 노동자들에게 별로 이롭지 않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사회적 대화나 노정교섭의 판을 깨버리곤 했다. 스웨덴에서도 연대임금 교섭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얻어 낼 수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노조 지도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면,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노조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노

조 지도자들은 대화 테이블에서 더 큰 양보를 강요 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양보를 통한 교섭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압박해 임금 억제 정책을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임금 방어하며 연대 강화에 힘 쏟아야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 때는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광범한 연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임금 총량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 묶은 경제 상황만이 아니라 계급 투쟁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기에 임금을 방어하거나 올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 억제를 수용하자고 설득하는 것은 계급투쟁의 전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억제에 정당한 불만을 품으면서도 투쟁에 적극 나설 투지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방어하면서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에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정부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도록 설득해야 한다. 조직된 정규직 노조들이 정부에 맞서 잘 싸우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감하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도 더 커질 수 있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은 비정규직이 스스로 투쟁해 더 나은 임금을 쟁취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이 조직화하고 스스로 싸워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올렸다. 이런 투쟁으로 일부는 호봉제의 요소를 얻어내기도 했다. 공공부문 지자체들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물론 비정규직 중 미조직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난 2년간 노조 조직물 확대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이었다. 이미 조직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들을 노조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유인이 됐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전략조직 담당 간부는 지난 2년간 조합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2016년 하반기에 벌어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지목했다. 이는 조직 부문의 투쟁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고무해 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좌파 활동가들은 정부의 임금 억제 공격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또, 양보론이 아닌 투쟁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연대 강화에 힘써야 한다.



추천 소책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김형영 지음, 2019.01.28, 42쪽, 2,000원

트럼프는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김준효

곧 방한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내내 평화는커녕 전 세계에 “화염과 분노”를 올려대 왔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부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이 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비해 대폭 늘었다. 2018년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는 공수표가 돼 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으름장냈다.

올해 이런 협박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향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갈등을 키운 끝에 이제는 “이란 말살” 운운하며 으르렁대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쿠데타 시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좌파 정부를 집요하게 위협하고 있다.

대선 때부터 트럼프는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면 이전 정부 때보다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대상은 중국이다.) 호전적 냉전주의자인 로널드 레이건의 구호, “힘을 통한 평화”가 트럼프의 기치다.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기성 권력자들이 지지를 몰아 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전 세계 극우 · 파시스트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기세가 올랐다. 집권 첫 해에 미국에서는 극우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식 통계를 보면 한 해에 17퍼센트가 늘었다. 같은 기간 유대인 혐오 범죄는 37퍼센트나 늘었다. 우려했던 대로 미국 극우



사진 포커스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익사한 아버지와 두 살배기 딸 — 트럼프의 이주민 단속 정책이 비극을 낳고 있다

트럼프는 가난과 절망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에 군대를 보내고 총부리를 겨눴다. 트럼프의 이주민 수용소에서는 어린 아이를 포함해 24명이 죽어나갔다. 6월 24일, 미국·멕시코 국경인 리오그란데강을 헤엄쳐 건너려던 이주민 아버지와 두 살배기 딸이 목숨을 잃었다. 떠내려가는 부녀를 강변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어머니에게, “100만 이주민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는 악마와도 같았을 것이다.

안에서 (소수지만) 나치가 준동하기 시작했다.

인종차별이야말로 트럼프의 무기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발표해 무슬림 혐오를 부추겼다.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미국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뜯어냈다. 트럼프가 세운 이주민 수용소에서 몇 달 새 아동을 포함해 24명이 사망했다. 6월 24일 미국 ·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강을 건너던 엘살바도르인 아버지와 그의 2세 아이가 익사해 버렸다. 아버지와 함께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트럼프의 이주민 정책이 얼마나 아만적인지 보여 준다.

트럼프의 여성 · 성소수자 천대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트럼프는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했고,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반낙태 · 반동성애 단체들의 연례 대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는 노동자 · 서민을 가혹하게 공격했다. 오늘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지만, 트럼프는 약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반면 복지는 난도질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공격했다. 안 그래도 궤죄죄한 오바마케어가 더 후퇴해 약 1300만 명이 의료보험 하나 없이 방치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이 비상사태”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저항에 직면했다. 당선 첫날부터 노동자 ·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와 동맹 휴업을 벌였다. 트럼프 취임 첫날인 2017년 1월 21일 약 420만 명이 미국 전역에서 ‘여성 행진’을 벌였다.

인종차별과 극우에 맞선 대규모 시위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트럼프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빗대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이 비상사태”라는 말이 그 시위들의 인기 구호였다.

노동자 저항이 커진 것도 중요하다. 2018년에 1986년 이래 가장 많은

약 53만 명이 파업에 나섰고, 대규모 파업 건수도 최근 10년 사이 최다였다. 무엇보다 공화당 표밭으로 알려진 주들에서 교사들이 대거 파업에 나서 노동자 투쟁의 선두에 섰다. 교사 파업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항이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버니 샌더스가 2020년 대선에 도전하며 ‘민주적 사회주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당 DSA도 10배 이상 성장했다.

트럼프 방한에 대한 항의는 트럼프에 맞서 미국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대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김영익

6월 29~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 · 미 대화가 다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계기로 북 · 미가 “대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제기한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방북,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방한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남 · 북/북 · 미 정상회담보다 한반도 상황에 더 결정적인 변수다. 남 · 북/북 · 미 관계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국제 정세 불안정을 부추기는 핵심 세력의 일부다.

미국 ·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통신 네트워크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열을 올린다. 이것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직결돼 있다.

양국의 제국주의 경쟁은 단지 무역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지정학적 갈등도 증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남중국해, 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를 빈번하게 벌인다. 6월 미국 국방부는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도 지목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맞불 무력 시위를 벌이고, 남중국해에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그 경쟁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플레이어인데, 그들이 하는 외교로 항구적 평화가 정

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

한반도만은?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만은 강대국 간 충돌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곳인 데다가, 그들 간의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은 근본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제국주의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이어서 개별 정부 수준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협력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하게 주문한다. 이번 트럼프 방한 의제가 단지 한반도 문제만은 아니다. 무역 등의 다른 의제가 있고, 거기에 화웨이 제재 동참 요구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 최근 일부 외신은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남중국해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요구들이 과연 한반도 정세와 무관할까? 그가 큰 항의에 직면하지 않고 서울을 다녀가는

게 진정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에 따라 대북 정책을 다룬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 자체보다, 그 테이블을 둘러싼 다른 상황을 더 중시한다.

이란 문제 같은 급한 현안이 있으므로 트럼프는 지금 북한과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 북한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말이 나오지만, ‘북한 선先 비핵화 기조’는 바뀌지 않은 듯하다.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북 · 미 관계 진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즉, 2월 북 · 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근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곧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 번째로 만나더라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의 순서부터 양국은 다시 맞춰야 한다. 합의 이행의 “검증”은 매 단계마다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월처럼 “영변 외 시설” 따위를 문제 삼아 미국이 협상을 뒤집는 모습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30년 가까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술하게 본 일들이다.

6월 26일 민중공동행동 대표자회의에서 범민련 활동가가 주장했듯이, ‘미국 지배자들이 언제 순순히 평화를 가져다 준 적이 있었는가?’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 바깥의 변수 때문에 협상이 다시 중단되고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교로 제국주의 간 갈등을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순 없다.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험을 부추겨 온 트럼프가 한반도에서는 선한 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무기강매, 대북제재강요! 내정간섭! 평화위협!

NO트럼프 범국민대회

일시: 6월 29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시장광장

주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공동행동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나, 조선소 노동자》(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코난북스)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의 구술집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조금 보다가 덮어 버렸다. 내가 조선소에 입사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정말 친한 형님이 바로 옆에서 돌아가시는 걸 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자다가 다리를 떠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이제 그 기억이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덮었던 책을 다시 들고가 참 어려웠다.

이 책이 묘사하는 사고 당시 상황과 노동자들의 처지는 너무 처참했다. 사고를 높은 곳에서 보고 정신없이 현장에 뛰어내려 왔는데,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주저앉은 한 노동자의 모습. 그 현장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인천에서 거제로 내려가 조선소에 취업한 뒤 ‘이모들’(도장을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친해져 행복을 느꼈다는 한 젊은 노동자의 사연도 너무 슬펐다. 이 노동자는 대우조선에서 만난 ‘이모들’을 설득해서 삼성중공업으로 함께 일자리를 옮겼다가 사고가 났다. 그는 자책했고, 일부 이모들도 그를 비난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얼마 전 법원은 삼성중공업에게 고작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장애를 갖



나, 조선소 노동자

— 배 만들던 사람들의 인생, 노동, 상처에 관한 이야기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코난북스, 288쪽, 15,000원

게 됐다. 그 광경을 본 형제, 가족, 동료들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30억 원도 아니고 고작 300만 원이라니! 삼성에게는 30억 원도 푼돈일 텐데 말이다. 정말 화가 난다. 벌금 액수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안전을 위한 투쟁

내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다쳤다. 지난해에도 2명이 죽었다. 그걸 보면서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의원으로서 안전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작은 가방을 메고 다닌다. 거기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는 핸드북이 들어 있다. 그냥 바깥 달라고 하면 안 먹히니까 규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책을 달달 외을 정



사고로 숨한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는데, 벌금은 겨우 300만 원에 그쳤다 2년 전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

도로 많이 공부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비용을 아끼려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다.

예컨대, 용접할 때 쓰는 마스크를 바꾼 일이 있다. 용접을 하면 유해 물질이 나온다. 특히 내가 일하는 잠수함에서는 용접의 종류가 달라서 일반 용접용 마스크보다 더 나은 걸 써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일반 마스크를 지급했다. 나는 처음에 규정을 몰랐지만, 한 직원이 ‘이 필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알려 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정부도 산재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일하는 특수선(군함) 공장은 노동부 감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가 공장 전체를 감사해도 특수선은 언제나 예외였다. 처음 특수선 공장에 갔을

때, 뭐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다.

가령,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용도인 A형 사다리의 핸드레일(사다리 옆 난간) 높이는 규정상 90센티미터다. 그런데 실제 특수선에서 사용되던 난간 높이는 70~80센티미터였다. 이렇게 난간이 낮으면 자칫 일하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문제 제기해서 바꿨다.

정규직 활동가들의 안전 개선 노력은 하청 노동자들의 조건도 개선시켰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는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이라 혼재 작업(폐인트칠, 용접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하면 함께 일하는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사측은 어떻게든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이를 무시했다. 결국 항의해서 혼재 작업을 막아 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혼재 작업을 못 하게 되자, 사측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야간 작업을 떠넘기는 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야간 작업은 정말 위험하다. 나는 야간 작업 중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본 적 있다. 당시 내가 들어간 배 안의 통행로 조명등 밝기는 기준치 미달이라서 깜깜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던 형님이 발을 빼끗해 떨어져 죽을 뻔했다. 나는 즉시 노조에 요청해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들을 퇴근시켰다. 이후 조건이 개선됐다.

안전을 위해 싸우면서 관리자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다. ‘적당히 하자’는 한 관리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싸워 나가자.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최미진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기사: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2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와 사측(남도장학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

다. 이는 지난해 초 1심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공동 피고에 포함시킨 남도학숙 전 관리자(원장과 고충처리담당 관리부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것은 아쉽다. 손해배상 총액(300만 원)도 그간 피해자가 당한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약소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1심 결과를 뒤집고 가해자와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향후 투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연대

이는 사측의 집요한 괴롭힘에도 끈질기게 싸워 온 피해자와 연대 단체들이 이뤄낸 성과다.

연대 단체들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올해 초에는 정의당 광주시당 활동가들이 주도해 피해자 지지모임을 결성했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사건 초기 피해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해 왔다. 광주전남의 오랜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권력자들이 남도학숙의 이사장 같은 고위 운영진이었다. 그래서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 싸움이 힘겨웠을 것이다.

사건 당시 남도학숙 이사장은 광주시장 윤장현과 현 국무총리 이낙연(당시 전남도지사)이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이용섭과 전남도지사 김영록이 남도학숙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배신으로 인한 지지를 하락 속에서 올해 초 ‘피해자 지지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는 피해자에게 힘이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보복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껏 피해자를 괴롭혀 온 사측은 심증팔구 2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상급자의 성희롱을 고발한 뒤 사측은 집단 따돌림, 모욕 주기, 퇴사 압박 등 온갖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일삼아 왔다.

참다 못한 피해자의 신청으로,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감사원에 산업재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그조차 기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이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초유의 일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사측의 행정소송에도 맞서 싸워 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소송(2심)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과 사측의 책임이 인정된 만큼,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은 파렴치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민주당 권력자들도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수수방관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 지지모임은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작성 바로가기: <https://goo.gl/forms/sZgsfuo7LV020F1v1>)

피해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독자들과의 많은 동참과 연대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7월 3일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정원

7월 3~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술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재정은 늘리지 않고 생색만 내려 했다. 지지부진한 정규직화, 자회사 전환 강요, 열악한 처우 강요 등 온갖 문제들이 벌어졌다.

게다가 올해 시행 예정이던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는 아예 통째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판이다. 정부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 '효율성' 운운하면서 민간위탁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비용 절감과 민간위탁 유지라는 사용자들의 이익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싸워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해 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는 개선을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다는 이유다. 해 준 것도 없으면서 도리어 큰소리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별 기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각자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공동으로 싸우자는 분위기가 커져 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운 요인이다. 누더기가 된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추가 개악, 파업권 약화를 노리는 노조법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에도 직결돼



정부의 배신과 공세에 파업 공조로 맞선다 2018년 10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파업 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라고 탓한다.

촛불청구서

우파들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항의가 급격히 느는 것에 매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황교안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을 비난했다.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서로 권력 투쟁에서는 이 전투구를 하면서도 노동 개악 추진에

는 언제든 앞장서고 공조할 태세가 돼 있는 것이다.

'고용은 안정됐으니 처우 개선은 나중에 하자'는 말도 온전한 사실이 아니다. 온갖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려 나갔다.

그러나 정부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노동자들이 여전히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야 하는가. 그간 정부는 세금 걷은 만큼도 지출하지 않는 인색한 재정 운영을 해 왔다. 걷어 들인 세금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은 수조 원을 퍼부어 살려서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넘겨주면서,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정부의 재정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만큼 잘 보여 주는 것 사례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조차 하락하는 상황에서 노동 개악과 임금 억제를 노골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노동개악 추진에 걸림돌이 될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세가 시작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 파업이 진행된다.

7월 3일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행동은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정부 투쟁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7월 파업을 실질화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와 배신, 공격에 분노하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 이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이 '합법적으로 대화할 공간'을 거부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대화'하자고 불려서 '답정너' 식으로 개악 들러리를 강요하다가 급기야 자신들이 대화 상대로 꼽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친사용자 정부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정부와 기관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더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모아 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적 투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활동가들도 능동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9

8.22(목)~25(일)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참가신청

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 | marxism.or.kr

노동계급과 노동운동

-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 여전히 계급이 중요한가?
— 한국사회의 분단선, 갑을인가 계급인가?
-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임금 격차와 연대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 노동운동에 주는 함의
- 노동자 경영참가
— 일터 앞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살려줄 것인가
- 노동조합과 사회변혁 —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쟁점과 전망
- 직무급제 임금개편 — 개선인가 개악인가?



- 조선업 위기와 저항 — 대우조선 매각/현충 인수 저지 투쟁과 과제
-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죽음과 고통
- 재벌에 맞선 투쟁과 노동운동

이밖에도 세계 정치, 동아시아 정세, 한국 정치,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정치, 여성&성소수자와 관련된 수십 개 주제가 더 있습니다. 더 많은 주제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